

바가지요금 발생한 축제 한시적 퇴출

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 제도 개편
축제육성위서 평가 제외 시 보조율 50% 제한
바가지 감점 올리고 글로벌 수용 태세는 가점

지난해 제주 유명 축제장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김밥 가격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던 가운데 앞으로 바가지요금이 드러난 축제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되는 등 패널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바탕으로 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축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내용이다. 올해 평가 대상 축제는 총 31개(광역축제 11, 지역축제 20)다.

이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 제외를 결정하면 지정 축제 대상은 물론 그로부터 3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특히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현재는 지정 축제 보조율

100%, 평가 대상 축제 보조율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항목별 -1점 등 최대 -3점 이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올린다. 세부 감점 항목은 ▶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새롭게 됐다.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축제장 음식값 바가지요금이 일자 요금 관리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도내 축제장에서 판매 품목별 가격표와 메뉴판을 부스마다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다른 축제장에서 또다시 유사 사례가 생기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거론됐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방선거 회계 실무 설명회
도선관위, 예비후보 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동문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 자금 회계 실무 학동 설명회를 연다.

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도지사·교육감·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후원회 대표자,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선관위는 참석자들에게 ▶ 정치 자금 개요 ▶ 정치 자금 수입·지출 방법 ▶ 회계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정치 자금 회계 사무 전반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병오년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탐라국 입춘굿 절기상 입춘(立春)인 4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가한 강희만기자

신흥 해안 자투리땅에 '녹색 쌈지숲' 조성

제주시, 야자수·황근 식재 특색있는 경관 조성